

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

● 202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는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을 발표하였음.

- 이번 대책은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,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경기 진작,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음.
- 특히, ① 성수품 물가 안정, ② 민생부담 경감, ③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, ④ 국민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함.

① 성수품 물가 안정

- 사과·배·한우 등 21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최대 1.6배(17.2만 톤) 확대 공급하고, 최대 900억 원 규모의 할인판매를 추진함. 또한, 감자·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, 정부양곡 5.5만 톤을 공급함(8.11: 3만톤, 9.12: 2.5만톤).

② 민생부담 경감

- 추석 전후 서민금융 1,145억 원 공급(햇살론 유스·불법사금융 예방대출·최저신용자 대출 포함)과 임금 체불 청산 융자 금리 한시 인하(~10.14.) 추진
-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 20% 추가 할인, 재난적 의료비 600억 원 확대, 에너지바우처 조기 확대, 장애인 근로지원인·출퇴근비 지원 확대 등 실시
-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.2조 원 공급과 61조 원 대출·보증 만기 연장, 전통시장 상인 대출·온누리상품권 확대, 공공배달앱 할인·외식업 규제 완화 지원
- 영세사업장 보험료 납부유예, 세정 지원, 공공계약 대금 조기 지급,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, 원자재 비축 물자 방출 확대 등 현장 애로 해소 병행

③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

- 추석 전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(9.22~)과 상생페이백(9.15~ 신청, 10.15~ 지급)을 차질없이 시행하고, 사 용처 확대·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높임.
- 지역 관광·소비·문화 분야에 숙박·여행·문화쿠폰,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국가유산·미술관 무료 개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추석 연휴 계기 소비 진작 추진
- 분산된 소비행사(코세페, 동행축제 등)를 통합해 10.29~11.9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개최
- 재정·공공기관·민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연말까지 7조 원 수준 추가 집행 및 신규 민자사업 발굴 확대(18.7조 → 19.7조 원)

④ 국민 안전

- 추석 전후 24시간 안전·위생 관리체계를 가동하고, 산재예방 융자한도 상향,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 원금 신속 집행, 노인·노숙인·결식아동 돌봄 강화 등 민생안정 조치를 추진함.

출처: 기획재정부('25.09.15)

세계 경제 동향

● 미국, 기준금리 0.25%p 인하 ■ 2025-09-17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, 2025-09-16 한국은행

- 2025년 9월 17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ederal Reserve Board)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25%p 인하하기로 결정함.
 - 6차례 연속 동결 이후 인하 결정
- 이번 조치는 경제 성장세 둔화, 고용 증가세 약화, 실업률 상승 등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됨(주간브리프 Vol. 34).
 -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(2%)를 웃돌고 있으나,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함.
 - 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음. 일부는 0.5%p 인하를 주장하는 등 완화 강도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음.
- 또한, 연준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(MBS) 등 보유자산 축소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,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함.
- 향후 추가 금리 조정 여부는 노동 시장과 물가동향 등 국내 경제지표와 대외 여건을 종합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임.
- 한국 경제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완화세(주간브리프 Vol.34)에도 청년층·제조업 고용 부진(주간브리프 Vol.35)이 이어져 통화정책 완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 또한,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국의 금리 인하 여력도 기존에 비해 유연해짐.
- 지난 8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상당수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한 기대감이 열림. 단, 금리 인하 결정에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과열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

■ 2024년 1월~2025년 9월 한·미 기준금리 추이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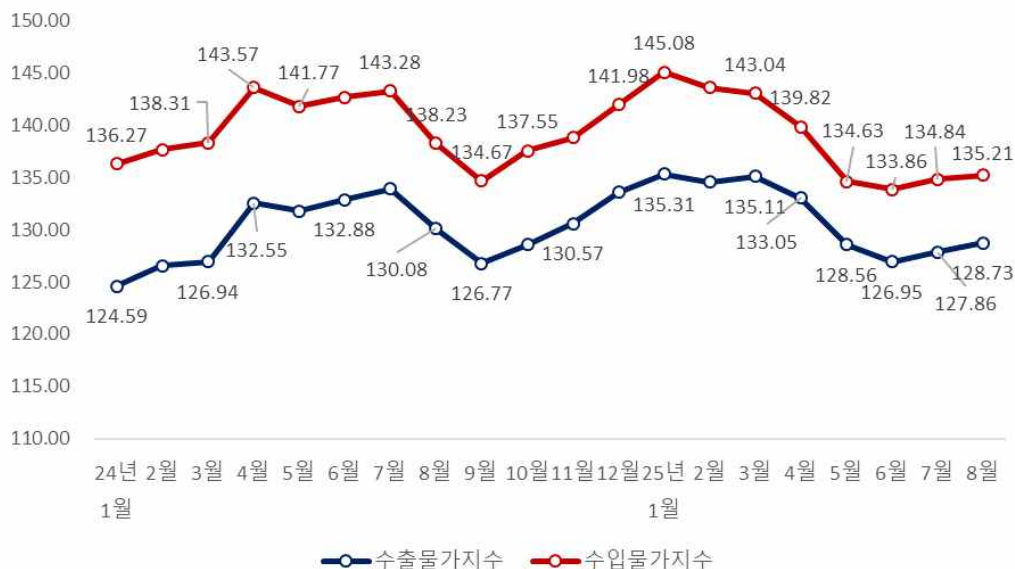


국내 경제 동향

8월 수출입물가 동향 | 2025-09-16 한국은행

- 2025년 9월 16일 한국은행은 「2025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(잠정)」를 발표하였음. 수출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.0%, 2.2% 하락함.
 - (수출물가) 전월 대비 0.7% 상승 (전년 동월 대비 1.0% 하락)
 - 농림수산품은 냉동수산물(전월 대비 3.3%)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.1% 상승
 -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의 가격 하락(전월 대비 -2.0%)에도 불구하고 컴퓨터·전자 및 광학기기(전월 대비 1.3%), 전기장비(전월 대비 1.0%)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.7% 상승
 - (수입물가) 국제유가* 하락에도 환율 상승**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3% 상승 (전년 동월 대비 2.2% 하락)
 - * 월평균 두바이유가(달러/bbl): '25년 7월 70.87 → 8월 69.39 (2.1% 하락)
 - ** 월평균 원/달러 환율: '25년 7월 1,375.22 → 8월 1,389.66 (1.1% 상승)
 -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의 가격 상승(전월 대비 2.9%)에도 불구하고 광산물(전월 대비 -0.7%)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.4% 하락
 - 농림수산물 중 주요 상승 품목은 커피(전월 대비 13.4%)
 - 중간재는 컴퓨터·전자 및 광학기기,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.5% 상승
 -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.7% 상승
 -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*는 전월 대비 0.6% 하락(전년 동월 대비 4.8% 하락)한 만큼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.
- *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수출입 계약에 사용되는 결제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며, 수입물가는 계약통화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함.

■ 2024년~2025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■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○ 일본 정부 새로운 '토지개량 장기계획' 수립 | 2025-09-12 농림수산성

-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'토지개량 장기계획(2025~2029년)' 수립을 결정하고, 농지의 규모화(대(大)구획화), 중산간 지역 노동 절감, 노후 농업 수리 시설 정비·보전 등을 추진하기로 함.
 - '토지개량 장기계획'은 토지개량 사업을 5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.
 - 이번 계획은 식량·농업·농촌 기본계획 및 토지개량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, 기존의 토지개량 계획(2021~2025년)을 1년 앞당겨 개정함.
- 새롭게 수립된 계획은 식량안보 확보와 다면적 기능 강화를 위한 4개의 정책과제와 5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함.
 - (생산 기반 강화) 농지의 규모화(대구획화) 및 집약화, 스마트 농업 설비 정비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 확대
 - (농업용수 안정 및 배수 조건 확보) 노후 농업수리시설의 보전·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및 배수 환경 확보
 - (재해 대응력 강화)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·감재 대책 마련으로 농업·농촌 회복력 제고
 - (농촌 가치 및 삶의 질 창출) 농촌 소득과 고용 기회 확대, 생활 환경 개선, 다양한 인재의 농촌 참여 유인 제공 등으로 농촌의 매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

■ 일본 '토지개량 장기계획(2025~2029년도)' 정책과제 및 목표 ■

정책과제	정책목표	핵심성과지표(KPI)
1.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	1. 농지의 집적·집약화 및 스마트 농업 추진 기반 정비를 통한 생산비 절감	· 기반 정비 완료 지역에서 쌀 생산비(노동비) 절감율: 60% 이상 · 기반 정비 착수 지역 중 스마트 농업 도입 가능지역 비율: 100%
	2. 일본 국내 수요를 고려한 생산 확대	· 기반 정비 후 밀·대두 생산량 30% 이상 증가 지역 비율: 80% 이상 · 기반 정비 후 원예작물 생산액 20% 이상 증가 지역 비율: 80% 이상
2.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양호한 배수 조건 확보	3. 농업 수리 시설의 전략적 보전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	· 농업 수리 시설이 보전되어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농지 면적 비율: 100% · 토지개량구 사업 혜택을 받은 면적 중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체제 구축 지역 비율: 80% 이상 · 노후 농업수리시설 교체 지역 중 시설 집약·재편, ICT 도입을 통해 유지관리비 절감 지역 비율: 100%
3.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응하는 농업·농촌 강화	4. 기후변화로 심화·빈발하는 재해에 대응한 방재·감재(減災) 대책 추진	· 방재 중점 농업용 저수지의 방재공사 착수율: 90% 이상 침수 피해 방지 면적: 21만ha
4. 농촌의 가치와 매력 창출	5. 농촌의 소득 향상과 고용 기회 창출, 거주를 지속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, 인재 참여 기회 창출	· 중산간 지역에서 종합정비 실시 지역 중 수익 향상 지역 비율: 100% · 농지보전 공동활동 소규모 조직 중 체제 강화 참여 비율: 50% 이상 · 중산간 지역 농업 생산 공동활동 조직 중 체제 강화 참여 비율: 50% 이상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정 혁신 추진을 위한 국정과제 확정 ■ 2025-09-16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업·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.

- 이번 과제는 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, ②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, ③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,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등으로 구성

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

- 식량자급률 제고, 농식품바우처·천원의아침밥·과일간식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와 함께, AI·스마트농업 확산 및 K-푸드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더불어 농산물 온라인 도매 전환과 가격결정 다변화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, 친환경·탄소중립 농업 지원을 병행하여 생산·소비·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임.

②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

- 농가 소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직불과 가격안정제 도입, 재해보험 할증 완화,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소득 안전망과 재해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임.
- 또한 공동영농법인 육성, 청년농 지원 확대, 퇴직연금형 저축·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인상 등을 통해 경영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할 방침임.

③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

-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,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, 농업 RE100 기반 확충 등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계획임.
-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육성, 빈집 정비·재생거점마을 조성, K-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, 교통·돌봄 등 필수서비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추진함.

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

- 「동물복지기본법」 제정, 동물복지진흥원 설립, 사육금지제·허가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동물 보호에서 복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,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함.
- 이와 함께 'K-농정협의회'와 '모두의 농정ON' 등 소통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과 농정 혁신을 구체화할 계획임.